

‘두 얼굴’의 한빛원전…이기적 행태 심하다



한빛원전의 온배수 배출을 둘러싼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온배수 배출기준 준수 요구에는 14년째 침묵하면서도 온배수 배출 등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을 늘려달라며 감사원 심사까지 청구하는 등 비상식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영광군이 향후 한빛원전측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만료(내년 5월)가 예정된 만큼 ‘관행적인 허가’ 방침에서 탈피, 온배수 배출 기준 준수 대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

■ 의무는 소홀

온배수배출기준 준수·어종급감 대책 요구 14년째 묵살

■ 권리는 혈안

공유수면 점·사용권 감사원 심사 청구 강행했다 기각

고 있다.

지난 30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월 4일 한수원과 한빛원전 측이 청구한 ‘(영광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 측은 지난 2011년 4월 공유수면을 30년간 점·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영광군에 신청했다가 4년 동안의 점·사용을 허가받았다.

한수원 측은 영광군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3년여 만에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광군은 당시 감사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온배수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어업 피해 예방대책 미비 ▲방류제로 인한 원전 주변해역 변화(수심 변화, 침식 및 퇴적)에 대한 대책 미비 ▲애초 허가 조건인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온배수 배출 기준 준수) 미이행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지역민 불안 증가 등을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수원과 한빛원전 측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원전 인근 지역 피해와 주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원전

측의 무성의함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한빛원전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배출 기준을 초과한 온배수를 배출, 광범위한 지역에서 해수 온도 상승이 이뤄져 영광 앞바다 어종과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측은 또 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십만~수백만 마리의 어류가 죽고 있는 등 원전 주변 해역의 어족자원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빛원전 측이 사용기간을 30년으로 신청한데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기 직전까지 사실상 영광군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기존 온배수 배출기준 미준수, 영광 앞바다 어종·어류 개체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한빛원전 측이 의무는 저버린 채 권리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청·경찰 미적미적…남광주시장 불법행위 봐주기 의혹

불법 자릿세·원룸 증개축 적발
동구 10일 넘도록 제재 소극적

위조 주차권 발행 확인하고도
동부경찰 형식적 수사 ‘도마’

광주 남광주시장 내 불법 ‘자릿세’ 징수 및 원룸 증·개축, 상가 주차권 위조 행위 등과 관련, 행정·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할 행정 기관인 동구는 시장 내 위법 실태를 파악하고도 10일이 넘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찰도 무료 주차권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미한 피해 사실’ 등이 거론되는 등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남광주시장 내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 시장상인회 측이 지난 25일 새벽 시장을 찾은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1000원씩을 거둔 사실을 적발했다. 동구가 지난 19일 푸른길공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자릿세 부당 징수 사실을 확인한 뒤 ‘자릿세 징수 금지 및 재발 시 위약 계약 해지’ 등의 방침을 통보한 이후에도 부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구는 부당 징수 행위를 두 차례 적발했음에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서’ 등을 근거로 한 제재에 나서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동구는 또 남광주시장 종합상가 내 불법 원룸 증·개축 및 임대 행위가 만연, 안전에 취약한 사실을 10년 넘도록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남광주시장종합상가 2층 불법 증·개축된 원룸 복도에서 동부소방서 직원들이 소방시설을 점검한 뒤 비상유도등을 교체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와 동부경찰, 소방당국은 남광주시장의 위법 행위 등을 파악하고도 형식적인 대처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서지 않아 화재 등에 따른 재해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구는 더 나아가 남광주시장 상가에서 진행되는 불법 원룸 증·개축 및 임대 행위 전수 조사를 벌인 뒤에도 별다른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선심 행정’을 펼친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난방기를 비로, 전열기 사용이 잦아

지는 시기로 대형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는데도 행정기관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는 커녕,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부경찰의 형식적 수사 방식도 도마위에 오르

고 있다. 동부경찰은 지난달 25일 남광주시장의 위조 주

차권 문제와 관련, 시장 주차권 발행처가 아닌 인쇄소에서 위조 주차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위조주차권에 대한 지문 감식을 의뢰한 것 외에 위조주차권 발행규모·발행처 등의 수사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의료과실 잇따라 인정

법원 “병원 손해 책임”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은 면제하더라도 병원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의 관련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및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 기존 형사 처분 결과에도, 법원은 환자 사망과 병원 측 과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병원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A씨 유족 등이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측은 원고 모두에게 3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병원측이 A씨가 응급실에 입원한 지 17시간이 지나도록 단순히 수액을 투여하거나 뇌척수액 검사만을 시행한 채 뇌경색 진단 및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증상을 살펴 초기에 뇌경색 증상을 발견, 적절한 치료를 실시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A씨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병원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와 예방적 치료가 다소 부족했다고 평가된다’고 보낸 답변서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망 당시 환자가 고령으로 입원 4일 전 이미 뇌경색 증상이 발생했고 신장질환,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학교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28일 간헐적으로 천장에 딸이 보이거나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하는 증상과 밥을 먹을 때 손에 힘이 없어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걸을 때 우측으로 몸이 기울는 등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관련 증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기에 받지 못했고 증세가 악화, 6월 12일 사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음료수병에 담긴 살충제를 마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증상이 악화돼 숨진 B(2)양 유족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측은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에도 해당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측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측 책임을 묻는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보은 대신 절도 ‘배은망덕 임신부’



○…가출해 오갈 곳 없던 자신을 재워 준 가정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 이른 아침 금품까지 훔쳐 달아난 30대 임신부가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정모(여·32)씨는 지난 11월5일 오전 7시 광주시 남구 서동 송모(30)씨의 가정집에 하루 동안 머무른 뒤, 송씨와 그의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집안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기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임신 4개월인 정씨는 지난 8월에 남편이 “임신한 사람이 PC게임에 빠져있느냐”고 나무라자 가출해 PC방과 찜질방을 돌며 생활해 왔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마웠지만 당장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어 PC방 요금을 마련하려고 훔쳤다”고 진술. / 박기용기자 pboxer@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뒤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 (방3 화2 거1)
4층 - 35평, 주택 (방3 화2 거1)

■ 시세 및 감정가 -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융 4억 가, 보 2억에 월 270만 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4층상가주택

주인 직매 H. 010-3605-5000